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의안 번호	286
----------	-----

제안일 : 2005. 3. 31

제안자 : 홍우길의원 외 6

1. 제안이유

- 지난 3월 16일 우리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과 최근 일본정부 지도층 인사들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하여,
- 10만 속초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일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속초시 의회에서는 10만 시민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탄 성명서 " 따로붙임 "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속초시 의회는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의회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또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 紀元)」 주한일본 대사와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 成彬)」 문부과학성 장관 등 일본 정부 지도층인사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1.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오래전부터 동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에 대하여도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엄연한 주권 침해 행위는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이 그동안 쌓아온 교류협력과 선린우호 관계를 파기하는 비도덕적, 비우호적인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3월 31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